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2, 3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12면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7, 8, 9면

코로나 중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11면

윤석열 정부의
노선 비판

4, 5, 6, 16면



우크라이나 전쟁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프레임은

사기다

관련 기사: 2, 3, 12, 13면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나토가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3월 15일자 <한겨레>는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 또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엔티엔 발리바르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소개했다.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점령에 반대하면서도 나토의 개입과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푸틴을 어떻게 저지하겠다는 거냐' 하는 반론에 자주 부딪힌다. 이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살펴본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음에 답해야 한다. “너희는 나토의 힘과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러시아를 어떻게 막겠다는 말인가? 살인자들이 이기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은 러시아의 공격에 직면한 키예프(키이우), 하리코프(하르키우), 마리우폴(마리우폴) 등지에서 실제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다.

이러한 물음에는 우선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의 침공이 참상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더 끔찍한 전쟁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갈수록 공세적이 되는 나토의 요구와 나토의 무기 지원은 핵무기가 동원될지도 모를 더 큰 충돌로 나아갈 위험을 키울 뿐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 7월,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정부들의 정책은 마치 분화 직전의 화산 경사면에서 벌이는 어린이 장난 같다.” 지금 유럽과 세계의 상황이 정확히 그렇다. 이 전쟁의 참상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서방의 보급로를 러시아가 공격하면 그것은 확전을 뜻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나토가 물러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나토를 더 불러들이고 있다”고 푸틴을 비난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폴란드의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려는 계획—아직은 논의 중에 있다—이



무기 지원 등 나토의 개입은 전쟁의 참상을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릴 위험이 크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태 전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나토의 개입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데서 우리의 대답이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푸틴이 패배하고 타도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다.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 전쟁으로

그것이 그저, 과거에 수많은 살상을 벌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의 힘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면 전혀 승리라고 할 수 없다. 미국 제국주의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자행했던 유혈 사태를 또다시 벌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

는 결과가 아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지원했지만 이것은 쿠르드족의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관심사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원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그들을 그냥 내팽개쳐 버렸다.

러시아의 패배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는 러시아 내의 전쟁 반대 운동이다. 이 운동은 더 성장해야 하고 전쟁에 대한 반감을 노동계급의 다른 불만과 결합시켜야 한다.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거리로 나와 푸틴의 전쟁을 규탄했다. 3월 11일 낮까지 1만 4000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시위대의 규모가 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운동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기 어렵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구호와 요구를 시위 안으로” 들여오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 전쟁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떤 순간이 되면 두려움은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시위대를 밥 먹듯이 두들겨 패고 감옥에 처넣는 경찰과 판사들이 갑자기 겁을 집어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반전 시위대는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썼다.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왔다! 솔직히 말해, 예상치 못한 일이다. 성 이사와 대성당과 뱀스키 대로에 모인 시위대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나는 미소를 거둘 수 없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우리를 겁주려고 애쓰는 정부의 온갖 선전은 시위대의 순수한 마음과 대담함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 거대한 시위대는 푸틴의 전쟁 노력을 저지할 수 있다. 물론, 반전 시위가 전쟁을 멈추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전쟁을 제약할 수는 있었다.

서방은 자신도 푸틴에 맞선 저항을 환영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저항은 서방에도 위협이 된다. 제국주의에 의한 학살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일어난 저항이기 때문이다.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7년에도 러시아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자 독일군 장성들은 이를 반기며 그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그 후 전쟁 반대 정서는 독일에서도 혁명을 촉발했다.

푸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쟁 반대 선동만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작업장 투쟁의 가능성을 힐끗 보여 주는 사건이 있었다. 니즈네캄스크시(市)의 게몬트사(社) 대공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터키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고, 이들의 임금은 달러와 루블화의 환율에 연동돼 있다. 그런데 루블화

“전쟁 반대” 러시아의 전쟁 반대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가치와 함께 이들의 임금도 폭락하자 파업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신문 <비즈니스 가제타>에 따르면 정부는 파업을 탄압하지 않았고 사용자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임금 손실을 만회해 주기로 금세 합의해 줬다고 한다. 이는 전쟁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러시아 지배자들이 계급 전쟁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일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

역사를 보면 러시아 지배자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고무적인 사례들이 많다. 러시아 제국이 러일전쟁에서 겪은 패배는 1905년 혁명으로 이어졌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겪은 엄청난 후퇴는 1917년 2월 혁명에 기름을 부었다. 1980년대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한 패배는 소련을 약화시키고 1989년 동유럽의 독재자들에 맞선 반란을 고무하는 요인의 하나가 됐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하나는 군대 내의 환멸과 사병 반란이었다. 전쟁 중에 보도되는 단편적인 소식을 너무 끈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러시아 병사들, 특히 징집병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군의 차량을 사보타주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참상을 토로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거듭 나오고 있다.

베트남 전쟁 때 사병 반란이 미군의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듯이, 러시아 군 내에서 번지는 환멸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나토의 책략에 매이지 않은 채 푸틴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어떠한가? <소셜리스트 워커>는 헤르손과 다른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일어난 시위에 주목한 바 있다. 여기서 평범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점령에 항의하면서도, 러시아 병사들을 전쟁 반대로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그들과 언쟁하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한다.

나토의 통제나 나토의 무기 지원과는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저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러시아가 결국 군사적으로 일종의 승리를 거두게 돼도 그럴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 주지 않을 테지만, 해방은 아래로부터 쟁취될 수

있다.

오만해진 제국주의는 종종 자신의 힘을 사악하게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굴복시켜 왔다. 그러나 그러다가 수년간 저항도 저항에 시달리며 굴욕적인 손실을 입을 때도 많았다. 이것이 1954~1962년 알제리에서 프랑스가 겪은 일이고,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 또한 이런 수모를 겪었다.

독립적 조직과 행동

마지막으로 나토 회원국 내에서 벌어지는 반전 운동이 있다. 모든 행진과 시위가 더 광범한 계급투쟁과 연결될수록 미국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서방과 친서방 국가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그런 반란을 선동하고 조직할 의무가 있다.

이 네 가지 요소, 즉 러시아 내의 반전 운동, 군대 내의 사병 반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저항, 서방에서 벌이는 반전 선동은 우리가 나토 개입을 거부하면서 제시하는 능동적 대안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전쟁은 현재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는 모든 지배계급에 맞선 반란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트리니다드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 CLR 제임스는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을 규탄한 확고한 반제국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를 몰아내려고 다른 제국주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CLR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탈리아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도적 떼와 억압자이기 는 매한가지인 프랑스 제국주의와 영국 제국주의에도 맞서 싸우자. 그러나 그들 사이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정치의 궤도에 끌려 들어갔다가는 악취에 정신을 잃고, 거짓과 위선의 늪에 익사하고 말 것이다.

“영국의 노동자와 아프리카의 농민과 노동자들이여,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동맹과 약속, 제재를 멀리하라. 그들이 쳐 놓은 거미줄에 걸리는 파리가 되지는 말자. 언제나 그랬듯이 독립적인 조직과 독립적인 행동을 견지하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신에서 배워야 한다.

찰리 킴버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975호 번역 이원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예멘 내전 등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더 많은 고객과 전장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2015년에 0.9퍼센트에서 2016~2020년 2.7퍼센트로 무려 세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방산 수출액은 37억 9800만 달러(약 4조 55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순위 세계 9위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정보를 보면, 특히 한국산 고성능 무기의 수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659퍼센트 증가했다.

무기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품목은 단연 K9 자주포다. 문재인 정부의 순방 성과로 언급되는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2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고 무기 수출액을 기록했다.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의 다양한 국가에 판매됐다.

한편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예멘 내전 개입 문제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된 데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3월 9일에는 한화가 사우디 국방부와 1조 원에 이르는 무기 수출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 방위사업청은 자국 수도

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방산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한국에서는 LIG넥스원 등 다수 업체가 참가해서 각종 미사일과 로켓, 정찰·타격 드론 등을 전시했다. 이 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단도 참석했다.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미사일 및 드론을 격추할 대공방어 시스템을 찾고 있다. 사우디가 개입한 예멘 내전에서 이미 30만 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사망했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과 물 부족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사우디와 이집트 같은 최악의 반인권 정권에 그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은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1000건 이상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를 보면, 2015~2020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09~2014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2344만 달러(265억 원)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수출액인 1019만 달러(116억 원)의 갑절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류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익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공공연하게 판매하기를 꺼리는 분쟁 지역에까지 적극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위선을 보여 줬다.

이에 반해 한국이 무기를 판매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억압을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게 한국 정부는 극도로 인색하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했던 2010~2020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퍼센트에 그쳤다.

한국 정부는 이 죽음의 수출을 당장 중단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박이랑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한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 1700원대에서 최근 2000원대로 훌쩍 뛰었다.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 가계당 연료비가 10만 6000원으로 이전보다 19.1퍼센트 늘었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3월 7일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지난해 평균보다 84퍼센트나 폭등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에서 30퍼센트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윤석열은 오히려 재정 긴축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돈 뿌리기”, “현금 살포 포폴리즘”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가 올랐다고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 단 한 차례 소액 지급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쳤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GDP 대비 6.4퍼센트로 주요 10개국 평균인 14.6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난해 예산을 초과해 세금이 무려 61조 원이나 더 걷혔다. 돈을 풀어야 할 때 오히려 짊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 회복세는 매우 더디다. 한국의 민간 소비는 2020년에 GDP 대비 5퍼센트 감소한 이후 2021년에 3.6퍼센트 회복해, 아직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돼, 올해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퍼센트를 기록했다.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인상됐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19 초기에 급격히 축소됐던 생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원자재·중간재 등의 공급 차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유가 긴축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삶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가 상승,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물류 대란 등이 그 사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경제 제재는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급 차질을 더욱 악화시키며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재 판매 기업들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오르는 생산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무계획적인 생산을 하는 시장 원리, 전쟁을 낳은 제국주의 경쟁, 기업들의 이윤 논리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급 차질

윤석열은 재정 긴축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물론 윤석열은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50조 원을 지원한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돈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소비쿠폰·캐시백”을 줄이고, 교육 재정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도 한다. 결국 노동자·서민 지원금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인데, 노동자들은 뺏기기만 하는 개악이다.

한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탈핵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거짓 선동을 하면서 냈던 공약이었다(관련 기사: ‘핵발전—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노동자 연대〉 404호).

그런데 벌써부터 우파 언론들은 한전의 적자를 줄이려면 이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이 설사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는 잠시뿐일 것이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놓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임금이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또 정부는 생필품 가격 인상을 규제하고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써야 한다.

특히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화물 노동자들에게 주는 유가 보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화물연대 등은 이를 위해 유가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최저임금제 개악 추진을 예고하며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 한다. 말로는 물가 안정을 말하지만, 재정 지출 삭감을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노동자 지원을 삭감하려 들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 완화·감세 등을 통해 투기를 활성화하고, 집주인들을 위해 임대차 3법조차 개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런 정책들에 맞서 아래로부터 저항이 커져야 한다. 역사를 보면, 물가 인상 시기에 생활수준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자극하고, 주한 중국 대사와의 공개 논쟁도 불사하는 등 자신의 친미적 지향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동안 미·중 갈등은 한국 지배계급에 상당한 딜레마와 압력이 돼 왔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대전제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외교·안보 현안들을 놓고 그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하고 중국에 저자세였다는 우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은 집권하자 바로 사드(THAAD) 배치를 받아 들였고, 바이든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문재인은 대만 문제에서 분명히 미국 편을 들었고 신기술과 공급망 문제 등에서도 대미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을 비롯한 우파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확실하게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 안에서 한국의 서열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협력해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밀어붙였지만,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려고 이른바 3불 정책을 표방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도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 한·중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미국 MD에 협력했고, 한·일 갈등 와중에도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등 한·미·일 군사 협력을 지속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려 한다. 그는 3불 정책을 아예 폐



윤석열은 종전선언 반대, 대북 선제 타격론, 대규모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12월 DMZ를 찾은 윤석열

기하고, 사드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대선 후보 티브이 토론회에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겠다고 명분으로 미국 MD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MD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추진돼 왔다. 따라서 사드 추가 배치 등 한국의 MD 참여는 결국 한·일 군사 협력 증대를 수반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변국들을 자극해 불안정을 키우고, 군비 경쟁이 악화되는 데 일조하는 선택이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도 강조하는데, 이는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쿼드

팬데믹과 미·중 갈등은 세계화 속에 형성된 세계 공급망에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들을 결집해 반도체 등 몇몇 첨단 분야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상당히 고심스런 문제다. 공급망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수록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윤석열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서도 미국은 최첨단 원천 기술 등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망 문제에서 “미국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쿼드(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안보협의체) 정식 가입을 검토하고, 바이든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 틀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물론 윤석열도 경제, 북핵 등 필요한 분야들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발

전하겠다고 말한다. 윤석열의 외교 자문인 김성환 고려대 교수는 공급망,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지향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2021년 7월 14일자 <중앙일보> 칼럼).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친미 안보 강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일정한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은 선거 기간 내내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타격론 등 강경하고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당선 직후에 낸 사설에서 윤석열이 사드를 또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국을 더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안정한 세계경제, 열강 간 갈등 증대 속에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은 깨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불안정이 더 악화되는 데 일조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아래로부터 커다란 우려와 반발을 자아낼 수도 있다.

김영익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윤석열이 내놓은 새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연금개혁 등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윤석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기초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은 70년대 에나 통할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선 다를 것이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재정 퍼 주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돈 안 들이는 기초가 훨씬 더 강했다. 그 탓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누더기가 됐다.

또한 오락가락하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윤석열은 이보다 더 과감하게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장담한다.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경제 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부활”하고 있다는 일부 좌파의 진단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사용자가 원할 땐 늘려라 고무줄 노동시간, 최저임금도 차등 지급? 지난해 말 윤석열 막말 규탄 기자회견

규제혁파, 노동유연화, 연금 개혁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구체적 정책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이렇다.

우선, 규제 완화와 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강조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 → 투자 확대 → 경제 성장 → 일자리 증대’라는 발상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경제는 저성장을 면치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양극화가 더 확대됐다. 규제를 완화해도 수익성이 높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초가 성공하려면 노동자 쥐어짜기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둘째,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현행 1~3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 예외(특례업종)도 늘리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무력화 공격에 이어 언발에 찬물을 더 퍼붓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셋째, 연공급제(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임금체계만 제대로 바뀌도 노동개혁의 절반은 완성”이라는 사용자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임금 억제 효과와 집단적 단결

의 약화를 노린다. 문재인이 추진하다 지연된 직무급제에 생산성·성과 요소를 더해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연금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한다.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연금을 더 내거나 덜 받는다는 얘기다.

다섯째, 윤석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발언을 해 왔다. 유세 과정에서 ‘강성 노조’를 비난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 등 노동쟁의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사용자들은 노동쟁의법 개악도 요구한다.



말로만 정규직화 문재인. 말만이어도 “퍼 주기”라는 윤석열. 3월 14일 발원 비정규직 기자회견

각개격파에 맞설 연대의 정치

윤석열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노동개악 추진은 노동계급에게 더한층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새 정부는 임기 초부터 전면적으로 공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처지다. 지금 지배계급이 사기충천해 하나로 굳게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계급 대중의 의식이 후퇴한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 조직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이후 오히려 더 성장했고 여전히 견제하다.

악명 높은 영국의 대처 정부도 초기에는 노동계급과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야금야금 공격해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도 노동자 계급 내부를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했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면서 말이다.

따라서 관건은 이런 이간질과 각개격파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연대의 정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조 지도자들 사이에 노(사)정 협조주의 노선이 강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 체결은 불발됐지만,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업종·지역별 노사정(노정) 교섭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보는 투쟁을 보편화하고 연대를 넓히는 데 장애가 됐다. 노동자들은 개별 작업장이나 노조별로 크고 작은 투쟁에 나서왔지만, 적잖은

경우 상급단체의 방치와 연대 회피 속에 고립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운동 전반에 연대 정신보다 부문주의가 커질 수 있었다.

노동운동 내에서 연대 의식을 깎아먹는 주장이 확산돼 온 문제도 있다. 가령, 정의당은 얼마 전 연대임금, 연대기금 등을 담은 사회연대전략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선 공약으로 연금 개악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방안들은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취지일지라도, 연대 투쟁이 아니라 정규직이 정부와 사측에 양보하자는 자기 패배적 전략이다.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을 고취하기보다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

일부 좌파는 양보론을 비판하지만, 오늘날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가능성을 회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간질 공격에 맞서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고 비정규직 투쟁이 패배하는 건 아니지만, 지지가 있을 때 우리 편의 힘과 자신감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연대를 촉진할 정치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혁명가들이 이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문성

이 기사는 3월 11일 발행된 '20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토론회 영상)'를 증보한 것이다.

5년 전에 촛불로 쫓겨났던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당한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년 전 대선, 4년 전 지방선거, 2년 전 총선에서는 “우파는 안돼” 하는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이 흐름이 이번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런 대선 결과가 빚어진 단연 가장 큰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열원이 좌절된 것에 대중의 실망과 분노, 배신감과 환멸이 컸기 때문이다.

개혁 열원 배신

사회주의 정치에서 개혁은 노동계급 등 차별받는 사람들의 차별과 착취가 완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문재인은 명백히 개혁을 배신했다.

문재인 집권기에 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더 확대됐다. 가령 최저임금을 첫째 올려 주고는 곧바로 제도를 개악해서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다. 이후로는 박근혜보다도 더 인상을 억제했다.

청년 실업도 더 악화됐다. 탄력근로제도 더 확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업재해 개선도 없었다. 그 밖에도 집값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코로나 고통 증대 등이 불만을 자아냈다.

공정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정권 핵심부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았다. 반면, 특권형 불평등 불공정 입시 경쟁을 벌인 조국을 옹호해 대중을 허탈하게 하고 분노케 했다.

우파의 화장술

결국 우파가 대중의 배신감과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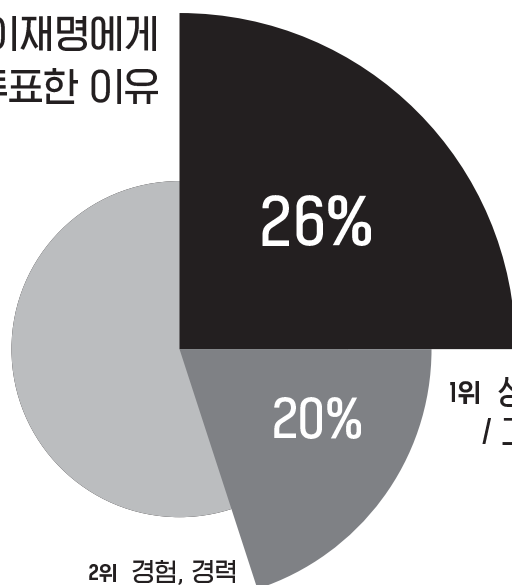
박근혜 국회 탄핵 당시 우파는 박근혜 탄핵을 놓고 분열했다. 또한 새누리당 당명을 긴급하게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별무소용이었다. 문재인 집권 이후에는 태극기 우파에 기대어 소생하려 했지만 선거에서 잇달아 참패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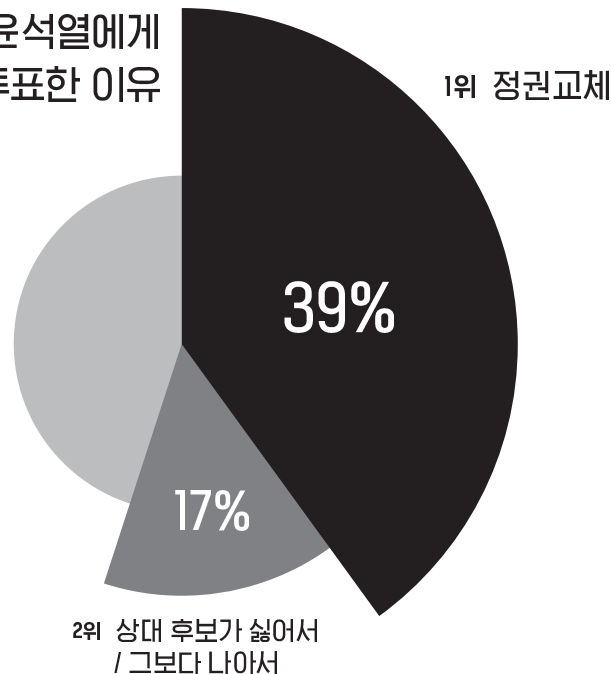
환멸론 이기지 못한 차악론

자료 출처 한국갤럽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



적으로 보일 짓을 상당히 자제했다.

‘막말리’ 의원들을 징계하거나 입 다물게 하고, 조짜 애송이를 당 대표로 앉히고, 급기야 정치 신인이자 자신들의 두 대통령의 구속에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세웠다. 그래야 득표에 확장성이 생길 거라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반사이익 흡수에 성공한 셈이다.

정권 심판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차악론이 환멸론(심판론)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차악론의 사기가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이 당선된 2002년 대선과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당시는 김대중에 대한 환멸이 커서 민주당은 차악으로 여겨졌지만 대선 직전 청년 수십만 명이 참가한 평화 염원 촛불 운동이 분출한 덕분에 노무현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당내 주류인 친문계가 아닌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워, 정권 심판론을 비켜가 보려고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당 주류와 타협한 이재명은 정권 심판론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서울에서 패했는데, 이전까지 민주당 후보가 서울에서 패한 것은 1987년 이래 치른 7번 대선 중 2007년 한 번뿐이었다.

청년들의 이반도 두드러졌다.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은 20대 연령층에

서 인기 후보였고, 임기 초에는 20대가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었다. 그러나 20대는 진작에 적극적인 이반층이 됐다. 5년 전 최소 절반이 20대였을 지금의 30대에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상당히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20대 남녀간 투표 차이를 과장한다. 그러나 여론조사들을 보면, 문재인 임기 동안 20대 남녀가 문재인에게서 이반한 추이는 전반적 추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전반적인 환멸 속에서 차악론이 좀 더 강하나, 심판론(환멸론)이 좀 더 강했냐의 차이였을 뿐이다.

대중의 보수화는 아님

이번 대선을 결정지은 민주당의 개혁 배신에 대한 심판 정서가 대중의 우경화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전국적인 우파의 총득표는 늘지 않았다. 5년 전 대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과 안철수가 얻은 표를 더하면 1704만 표였다. 이번에 윤석열이 얻은 표는 1639만 표에 그쳤다. 이번에는 우파의 승리 자신감과 투표 의욕도 더 높았고, 우파의 선택지도 분열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저조했다. 지상

▶ 8면으로 이어짐

청년층의 이반과 환멸

그림출처

▶ 7면에서 이어짐

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20대 연령층 투표율은 전체 평균보다 10퍼센트 낮게 나왔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전체 투표율은 거의 같은데도) 20대층 투표율은 5년 전보다 11퍼센트 낮다. 5년 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이번 대선에서 30대 연령층을 이뤘을 텐데, 이들의 투표도 줄었다.

후보 선택은 어땠을까? 선거 직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투표자의 51퍼센트는 투표일이 일주일이나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 돼서야 투표 후보를 정했다. (투표당일·투표소에서 정했다'는 12퍼센트)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는 20대 연령층의 절반이 선호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싫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투표했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우파와 윤석열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대안 부재 현상과 정치적 유동성이 더 두드러진다.

노동운동

그렇다면, 중도 정당 민주당의 개혁 배신에 실망하고 화가 난 정서가 왜 심상정 등 좌파가 아니라 보수파인 우파에게로 갔을까?

5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은 노동자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두 달 넘는 파업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촛불 운동이 2016년 12월 초순 무려 230만 명 규모로 커지자 여야의 주류 정치세력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중단시키고 박근혜를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으로 대처하려 했다. 반부패 민주주의 운동이 계급투쟁으로 변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급진좌파들은 대부분 침묵하거나, 일각에서는 다소 엉뚱하게도 “이재용 구속, 재벌 반대”라는 구호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개혁주의에 도전하기를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결국 운동의 헤게모니는 이후 민주당 측으로 넘어갔다. 사회운동 내 친민주당 개혁주의자들은 촛불을 문재인 집권의 응원부대로 삼으려 했다.

이런 노선의 문제점은 문재인 집권 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노동운동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개혁을 얻으려던 개혁주의 지도부의 공상적인 노선으로 노동운동은 주변화됐고, 이 노선은 대중의 불만으로부터도 문재인을 옹호했다

의 개혁주의 지도부들(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개혁을 얻으려고 했다. 이 공상적인 노선으로 노동운동은 주변화됐다.

이 노선은 단지 우파에 맞서서만 문재인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불만으로부터도 문재인을 옹호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 사례였다.

주요 좌파는 조국 사태 때 그의 특권형 불공정 문제를 변호하거나 침묵했고, 이후 정권 부패 수사를 막으려는 소위 ‘검찰 개혁’을 지지해 줬다.

정의당은 그런 지지의 대가로 선거제 개혁을 얻어 내려 했다. 그러나 되레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설립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진보당은 이 위성정당에 참여하려고 시도했었다.

단기적 선거 이득을 위해 공정·정의 염원을 배신했으니, 주요 좌파의 이런 노선은 지지층에게 실망스런 야합으로 보였을 것이다. 선거주의도 문제

지만, 민주당에 의존해 국민의힘을 견제하면서 개혁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스스로 취해 왔기 때문에 대선 국면이 돼서야 “양당 체제”가 문제라고 주장해도 그 지적에 힘이 실리기 어려웠다.

톨게이트, 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 등 주목할 만한 개별 투쟁들이 벌어졌지만, 광범한 연대는커녕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에서도 연대가 부족했고 개별 노조의 투쟁을 상층이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노동운동 자체가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정치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런 효과로 좌파적 대안의 부재 현상이 존재했다. 그래서 노동자와 서민의 선거 표심이 이재명에 대한 차악론적 기대에 머물렀다. 그리고 바로 같은 이유에서 좌파 자신의 선거 성적도 보잘것없었다.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투쟁 대신에 문재인을 개혁 주체로 세우고 그의 개혁 배신에 침묵해 왔던 것의 결과로 주요 좌파는 문재인과 함께 덩달아 실망의 대상이 됐다. 주요 좌파의 대선 득표 결과를 보면, 어쩌면 이번엔 함께 심판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대선과 좌파

이런 문제는 주요 좌파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와서야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민중 후보 단일화 등 상층 조정을 시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대선 기간에도 2개월 넘게 1천 수백 명이 참가한 택배노조 파업을 다섯 차례나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경적인 제3지대 공조론으로 실망을 샀다.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적 개혁주의적 한계를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 존재감이 줄어들고, 정의당 후보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노동 없는 대선”을 걱정할 정도로 노동과 좌파는 이번 대선에서 존재감이 아주 미미했다.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구이자 노동정치 1번지이던 울산에서 이재명의 득표는 5년 전 대선(문재인)보다 늘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울산에서 득표가 3분의 1로 줄었다. 민주노총 대선 방침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변혁당과 노동당은 민주당의 배신과 민주당을 지지한 정의당의 패착이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선거적 기회를 줄 것으로 착각한 듯하다. 이런 부정확한 기대감 때문에 좌파 대부분이 20대 대선이 “한국 사회의 전환점”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과의 협력 노선을 취한 온건 좌파들을 말로 비판하고 선거에서 더 급진적 공약을 내건다고 해서 불리해진 세력균형이 만회되는 것이 아니다. 폭넓은 운동으로 변화 염원 대중의 정치의식과 사기가 고조될 때, 좌파의 존재감이 커지고 좌파적 요구가 사람들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



새 정부의 전망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와 팬데믹 위기, 국제 질서 불안정, 그리고 기후 위기 등 4종의 위기가 체제와 지배계급을 압박하고 있다.

이 위기들이 서로 연결·조합되면서 위험이 증폭된다. 미·중 갈등이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전쟁 위기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 질서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그룹 회장인 최태원은 수년 전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 겪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글로벌 위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지배계급은 더욱 날카롭게 분열돼 있다. 위기 대처를 놓고 합심하지 못하고, 공식 정치는 늘 분열해 있다.

북한·중국·일본과의 관계 문제, 경제 회복과 고통 전가를 위한 노동자 공격의 속도,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 등 수많은 문제가 겹쳐산중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전통적 선호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선호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들은 윤석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일제히 윤석열에게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그들이 원하는 노동개악에는 노동조건뿐 아니라 노동쟁의법 개악이 포함돼 있다.

사실 자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운동을 이력저력 관리해 사회적 평화를 다소 회복한 덕을 봤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로 민주노총 관료들이 우대되고 노동개악이 지연된 것에 불만이 커졌다.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면 한시가 급한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은 신년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노조 편향적이었던 것은 문제라며, 노동개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은 CJ그룹 일가이며 회장 출신이다. 그의 발언은 CJ대한통운 파업과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일 것이다.

한편, 우파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한·미·일 동맹 강화를 함축), 지정학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



신정호 / (좌)바이든 대통령, (우)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의 기초는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친미 안보 강화 노선. 당선 5시간 만에 바이든과 통화하는 윤석열

중심의 질서에서 위상과 서열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도 이런 견해인 듯하다. 그는 반중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며, 주한 중국대사와의 논쟁도 불사했다. 윤석열은 당선 확정 5시간 만에 바이든과 통화를 했다. 5월이 취임인데, 5월 한미 정상회담 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윤석열은 다음날 일본 총리 기시다와도 우호적으로 통화했다. 반면 중국과는 중국 대사 면담만 했다.

새 정부의 기초는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친미 안보 강화 노선

물론 윤석열은 이런 기초를 임기 초

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집권했지만, 대중이 우경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촛불 운동 이후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했는데, 그들은 건재하다. 그 대표 사례 하나가 택배노조인데, 이들은 무임금 장기 파업에도 조직을 유지했고, 성과를 거뒀고, 여전히 단결된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선거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중이 우경화한 결과가 아니다. 변화 염원 대중이 대안 부재와 (노동계급의 경우) 계급의식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우파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의식의 후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20대 청년 투표에서 드러난 젠더 차이는 아주 부차적이다. 부차적 차이를 일부러 부각하는 것은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에서 체제 수혜자들의 책임을 호도하고, 대중을 분열시켜 불만을 돌리고, 일부를 기반으로 삼으려는 책략이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세대 내 계급 불평등이 더 본질적 분단선이다. 노동계급 청년 남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하고 화가 났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신자유주의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책에 빠르게 태도를 전환할 수 있다. 투표에서는 조금 달랐어도, 장차 새 정부의 개악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

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들로 윤석열 정부는 우파적 의제를 띄우면서도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움직일 듯하다. 경제 불황 속에서 집권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도 네 차례나 집권에 성공했지만, 첫 집권기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보편적 공격을 서두르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간질해서 각개격파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취약해진 후에야 두 번째 집권기에 강성인 광원노조를 공격했고, 이후 노동법들도 개악했다.

이런 점들과 사용자들의 공세 필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자 투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좌파 정치세력들도 이런 운동들에 힘입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경제주의와 부문주의)적인 대응에 머물고 연대를 구축하는 정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투쟁과 부흥은 개혁주의적일 것이고, 이는 변화의 가능성을 제약할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듯이 세계 정치가 하도 역동적이어서 개혁주의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격동적인 정치 상황이나 거대한 대중 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에게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이 클 필요도 없고, 지속될 필요도 없다.

**폭넓은 운동으로
변화 염원 대중의 정치의식과
사기가 고조될 때,
좌파의 존재감이 커지고
좌파적 요구가 사람들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
새 정부에 제대로 맞서려면
연대를 구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좌파 후보 셋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얻은 표는 다 합쳐 85만 표가 좀 못 된다.

그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0여만 표를 차지한다. 그러나 5년 전 대선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했으므로 반토막이 더 났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만 700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산별 노조 위원장들 등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김재연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득표다.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당이 실천면에서 여전히 좌파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기에 일단 이 글에서는 논외로 친다.)

이백운 노동당 후보는 9000여 표를 얻었다.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출신 후보 김소연과 김순자 후보가 각각 얻은 1만 6000표, 4만 6000표를 합친 것에 크게 못 미친다.

설명

좌파의 대선 성적은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

일부 좌파는 공고화된 양당 구도와 민주경선을 통한 좌파 후보 단일화 협상의 결렬을 원인으로 꼽는 듯하다.

양당 구도가 견고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정치 현상을 묘사하는 것일 뿐이고, 좌파의 성적이 저조한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게다가 반례들이 있다.

양당 구도 속에서도 200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좌파 후보(각각 권영길과 심상정)가 약진했다. 두 대선의 공통점은 선거 직전에 대중 운동이 분출해 우파를 약화시키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좌파도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중재해 노동자 정당들 간 민주경선 협상이 설령 타결됐다면 좌파 후보의 성적은 거의 나아지지 않거나 나아졌다 해도 미미한 수준이었을 듯하다. 선거 결과로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을 따르지 않을 조합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선거 결과를 단지 선거 직전이나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했느냐로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친자본주의적 '개혁' 정부가 등장했을 때,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노동자 운동을 이윤 시스템과 기존 사회 구조에 맞세우지 않는다면 세력 균형은 사용자들과 기업주들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 벌어진 일이다.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등 대표적인 노동계 지도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매우 의식적으로 조절했다. 말로 하는 비판조차 조심스러운 마당에, 만만찮은 수위의

투쟁에 노동자들을 대거 동원하는 노력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정당과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그 저항이 강력할수록 더 많은 개혁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럴 때, 정치적 세력 균형이 좌파에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야 선거 공간에서조차 좌파가 전진할 여지가 생긴다.

다르게 작동하는 선거 논리와 투쟁 논리

하지만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세력들은 계급투쟁보다는 선거주의 방향으로 내달려 왔고 그 결과 세력 균형은 노동계급과 좌파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지 못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선거법 개정에 거의 '올인' 했다. 그 목표 하나로 조국의 특권을 변호했다가, 정부로부터 정서적으로 이반하는 변화 염원층으로부터 좀체 씻기 어려운 실망을 샀다.

특히, 가장 부적절하게도 안철수·김동연과 '제3지대 공조'를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계급의 친구가 아닌 자들을 친구라고 자기 노동자들에게 말했던 셈이다. 결국 안철수는 윤석열에게로, 김동연은 이재명에게로 갔다.

진보당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에 참여하려 민주당에 의해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게다가 진보당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해 방어하기를 거절한 데서는 그 기회주의에 그저 쓸쓸한 따름이다.

선거와 투쟁은 다소 다른 논리가 작용한다.

최일봉이 <노동자 연대> 406호(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에서 지적하듯이, 선거 정치에서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수다. 선거의 저울에서는 좌파 후보의 1000표나 부르주아 후보의 1000표나 똑같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가 강조했듯이, 사회적 투쟁에서 득표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투쟁의 저울에서는 한 공장 노동자 1000명이 하급 관리, 그들의 부인과 장모 등을 합친 1000명보다 100배나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요컨대, 주요 좌파 정당들이 선거주의를 강화한 것은 노동계급의 사회적 장점과 강점을 무시한 것이었다.

물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좌파 후보가 지역에 뿌리내린 상이한 정도에 따라 대선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국가 수반을 뽑는 대선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으로 바뀌고,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좌파 후보가 선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인식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사진 출처 대구광역시의료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자, 문재인은 “1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귀한 존재였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정부 자신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을 대폭 완화했다. 많은 전문가가 경고했듯이, 감염자 폭증과 그에 따른 중환자·사망자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영업시간 제한 철폐, 실외 마

스크 해제 등 방역을 더 완화하자는 방향이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방역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검사를 유료화하고, ‘재택 치료’라며 환자를 방치했다. 최근에는 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줄였다(1인 24만 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심지어 병상을 확보한다며 7일이 지나면 중환자들을 격리 병실에서 내쫓고 있다. 이후부터는 치료비 지원도 끊는다.

그 결과, 감염자는 계속 늘고 환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나 몰라라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현실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 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본지 407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루만

더’, ‘제발 오늘도 무사히’를 되뇌[며] 고비를 넘겼더니, 이번엔 어마어마한 치료비 명세서가 날아왔다.” 석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본인부담금) 4200만 원이 찍힌 청구서를 받은 보호자도 있다.

보호자들이 국가에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이 악화됐을 때 치료 전액 지원은 어렵다”며 이들의 요구를 차갑게 외면했다. “타당성”, “형평성” 운운하며, 보호자들이 다른 치료비까지 받아 내려고 생떼 쓰는 것인 양 호도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와 ‘기저질환 악화 치료’는 예리하게 분리될 수 없다.

“코로나는 겨우 나왔다 할지라도 이후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저하됐다면, 이걸 어디까지든 코로나이고 어디까지는 기저질환 악화인지 할 수 없다. 아무리 고명한 교수라도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보호자 모임’ 보도자료에서 인용).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 조수진 씨는 정부 말이 “격리 해제 기준인 7일 만에 병이 다 나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환자 대부분이 격리 기간 중에 완치가 안 돼, 몇 달째 중환자실에 있다.(조수진 씨의 인터뷰 전문 보기)

‘보호자 모임’이 한 자체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 3명 중 1명은 기저질환도 없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전에는 집에서 일상 생활을 했다.

정부의 외면은 사람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 뿐이다. 치료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성지현

[관련 기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조수진 씨의 인터뷰 보기



정부 따라 방역 포기한 르노삼성자동차 확진자 속출에도 공장 가동에만 급급

박기훈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떠넘겨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명가량이 있는 한 팀에서는 확진자가 9명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정부 방침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강그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하라고 한다.

또, 사측은 자가격리자 100여 명에

게 일단 출근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42명이 검사를 해 그중 4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60명은 신속항원검사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됐다.

사측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검사를 하는데, 양성 비율이 5~8퍼센트로 위험한 수준이다. 확진자가 더 생기면 공장 일시 중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생산에만 급급한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벽에 일어나서 8시간의 주간 근

무를 마친 노동자를 코로나로 인력이 없다며 곧바로 야간조에 투입하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16시간 근무에 내몰리고 있다. 얼마 전 나도 주간 근무를 마치고 나니, 관리자가 야간조에 사람이 없다며 계속 일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내려온다.

생산직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어떤 공정에는 한꺼번에 노동자 8명이 양성 확진으로 라인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사무직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 빈 자리에 투입된 관리자들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은 “다 죽자는 것이냐”면서 불만이 크다. 각자 알아서 조심하자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환경, 안전,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는 방역과 관련한 단협과 별도의 수칙이 있다. 이것을 정부 방침을 핑계로 덩달아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다 코로나 걸리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사측의 방역 포기과 납기에 급급한 생산은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주의 사회의 횡포를 보여 준다. 이로 인한 책임과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됐다.

3월 14일 르노삼성자동차노조,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새미래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서 사측에 방역 강화를 요구했다.

3월 6일 러시아의 침공, 서방과 한국 정부의 제재에 모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김준호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래 강대국 간 직접 충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강대국 간 충돌에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해 즉각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가 낳는 참상을 이유로 서방이 더 많은 살상과 파괴를 촉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이 전쟁에서 ‘권위주의’ 러시아에 맞서 ‘민주주의’ 서방을 지지해야 한다는 서방 측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컨대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

하 존칭 생략)는 “미국과 유럽이 세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 현실 세계에서 작동 가능한 유일한 질서”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지원 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윤소영 전 한신대 교수도 “권위독재주의”에 맞서 바이든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수호하려는” 서방 주도 국제 질서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서유럽의 군비 증강이 “최선”의 평화 보장책이라고 주장한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의 인터뷰도 번역·게재했다.

같은 체제의 일부

한지원은 “부패한 재벌과 독재를 주변국에 수출하는” 러시아 체제가 서방의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보다 “퇴행적”이라고 한다. 서방 제국주의에 관한 일종의 ‘차악론’인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퇴행”, “최악의 재벌 경제”는 서방이 주도한 신자유주의가 러시아에서도 관철된 결과였다. 1990년대에 러시아 대기업의 77퍼센트와 중소기업의 82퍼센트가 민영화됐는데, 서방은 이를 적극 반겼을 뿐 아니라 합작 회사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 떡고물을 챙겼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러시아 경제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갔다. 푸틴은 이에 대항해 혹독한 권위주의 정치를 추진했다. 푸틴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러시아 자본주의를 국가 주도로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억눌렀다.

가장 큰 피해는 러시아 노동계급이 입었다. 오늘날 러시아의 불평등 수준은 미국과 비슷한데, 심각한 불평등은 지금도 러시아 사회의 최대 불안정 요인이다.

러시아 자본가 주류는 소수의 예외를 빼면 푸틴과 유착했다. 더 많은 경제적 득을 보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은 러시아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도 만연해 있다. 양적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서방은 푸틴의 통치 스타일을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서방에 득이 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서유럽 자본주의의 연료 구실을 했고, 러시아 자본이 서유럽 금융시장에 들어가 서방 금융가들을 만족시켰다. 푸틴은 선진국 클럽 G8의 일원으로 대접받았다.

요컨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서방 주도의 정치·경제 질서 안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근래에 서방이 푸틴의 권위주의를 문제 삼는 까닭은, 러시아가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서다.

사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 자국 패권을 굳히려다 위기에 빠진 것과 관계있다. 이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열강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변했고, 러시아에게는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려 나설 기회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결과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식 해석은 실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회진보연대는 “푸틴이 전쟁의 명분으로 나토의 위협을 내세우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치부한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서방 제국주의의 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변호론이 될 뿐이다.

우크라이나 ‘민족 자결권’?

사회진보연대 측은 옛 동구권 국가들이 “국민이 원했고 … 이득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나토를 선택”(한지원)했음을 부각한다.

하지만 왜 나토는 러시아의 가입 의사를 두 번이나 외면했을까? 서방이 30년에 걸쳐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유혹하며 동진한 것은 러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의 일부였다. 그 과정에서 서방은 전쟁도 불사했다.

서방의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확장은 동유럽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계급 삶의 망가짐,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을 낳았다. (관련 기사 본지 304호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0년, 동유럽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다. 우크라이나 지배층은 친서방·친시장 개혁(신자유주의)이 자기들에게 득이 되리라 보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긴축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중은 심각한 불평

등에 시달리게 됐다. 반동적 민족주의와 파시즘이 성장하고 소수민족들이 크게 억압받았다.

젤렌스키 정부 역시 친서방·반러시아 국수주의를 강화해 왔고, 지금도 서방의 군사 개입 확대를 요구하며 긴장 고조에 일조하고 있다.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낳을 것이 분명한 우크라이나 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이 전쟁에서 서방의 비호를 받은 젤렌스키 정부가 승리하면 우크라이나를 서방 제국주의 쪽으로 더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는 다시 서방과 러시아 사이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의 속박에 맞선 민족자결권 운동이 진보적인 것은 피억압 민족의 해방이 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한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또 다른 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없다.

러시아 제재 지지해선 안 된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식인 러시아 경제 제재를 “연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푸틴의 권위주의에 맞선 러시아인들의 저항도 약화시킨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경제 붕괴의 위협은 푸틴에게 군사적 응전에 나설 압력이 된다.

하지만 제재의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를 것은 푸틴이 아니라 평범한 러시아인들이다. (관련 기사 본지 406호 ‘누가 제재의 대가를 치르는가?’)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푸틴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제재로 생존 위기에 빠진 러시아 대중이 푸틴을 더 증오하게 될 수도 있지만, 서방의 압박에 맞서 자국 국가 지지로 결집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푸틴이 반전 운동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반(反)푸틴 저항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안은, 서방과 러시아 제국주의 모두의 패배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이는 푸틴의 전쟁 수행에 대한 저항이고, 서방 세계에서 이는 나토 확장, 자국의 참전 가능성,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제재(강화)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항이 강대국들 간 갈등을 끊이지 않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방 지배자들은 그 경쟁 체제에서 득을 보는 자들이므로, 지지를 제공할 대상이 못 된다.

.....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도 줄이고, 푸틴의 자금줄을 차단해 전쟁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함께’(Stand with Ukraine)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연명했는데, 그린피스와 350.org처럼 유명한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나 멸종반란의 지역 조직들도 동참했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솔루션이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환경 운동가들의 발의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성명은 러시아를 “이번 전쟁의 유일하고 명백한 호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는 “모든 비폭력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를 막을 것을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정치적 대표”들에게 촉구했다.

비폭력 수단들?

먼저, 러시아만을 유일한 호전 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신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해 왔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공급하며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다.(관련기사: ‘나토는 러시아 침공의 해결책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 407호)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양쪽 당사자 중 한쪽 편에 상대측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뒤인 3월 8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즉각적인 효과



사진 출처: Paul Lowry(블라카)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 금지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서방이 그 시장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로 전부터 오르고 있던 국제 유가가 한층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빈국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한편, 푸틴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각종 원자재 수출도 금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사실 푸틴이 이런 제재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쟁을 벌였을 리도 없고, 이런 제재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러시아 대중이 이런 조치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자체가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중단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러시아 대중이 그 고통의 원인이 푸틴에게 있다고 확신한다면 푸틴에게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반전 운동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고통의 강도에 좌우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에서 외세에 맞서 온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푸틴은 국내의 반전 운동을 탄압하기에도 유리해질 것이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제재의 대가를 치르는가?’, <노동자 연대> 407호)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치가 세계적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성명에서는 러시아 석유 수출을 막고 유럽 다른 나라들도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금줄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성명에서 수입 중단을 촉구한 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59퍼센트를 차지하고, 러시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11배에 이른다. 무엇보다 석유와 가스는 미국의 거대한 군대를 운영하는 “자금줄”이기도 하고, 이들은 러시아 기업이 쫓겨난 석유 시장을 서방의 석유 기업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석유기업들은 바이든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에너지 의존을 줄이겠다고 북해 원유 생산과 핵발전 증대 의사를 내비쳤다. 불과 다섯 달 전에 있었던 기후 정상회의의 미사여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영국의 보수 언론들은 “마침내, 보리스 존슨이 에너지에 관한 녹색 교리에서 벗어났다”고 환호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국유지에서 석유 가스 생산을 위한 시추 건수는 트럼프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이든이 임기 초에 약속한 기후 대응 예산은 의회 협상을 거치며 4분의 1로 줄어들어 국방 예산보다도 적어졌다. 그조차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충돌이 낳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도,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러시아 푸틴과 서방 지배자들 모두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특히, 한국의 반전 운동과 기후 운동은 이 성명에서 한국이 특별히 지목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제재 동참이 제국주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데에서 작지 않은 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국의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도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의 반전 운동과 기후 운동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한국 정부가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방과 한국 정부의 위선적인 러시아 제재에도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논쟁점,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공수처 통상조치 논란, N번방 방지법 ...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하는 [주말 pick] /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전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규직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복잡하다.

탄핵안은 위원장 탄핵 사유로 7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중 적잖은 항목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예컨대, 탄핵안의 첫째 사유는 2021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위원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단체협약을 자동 갱신하고,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확정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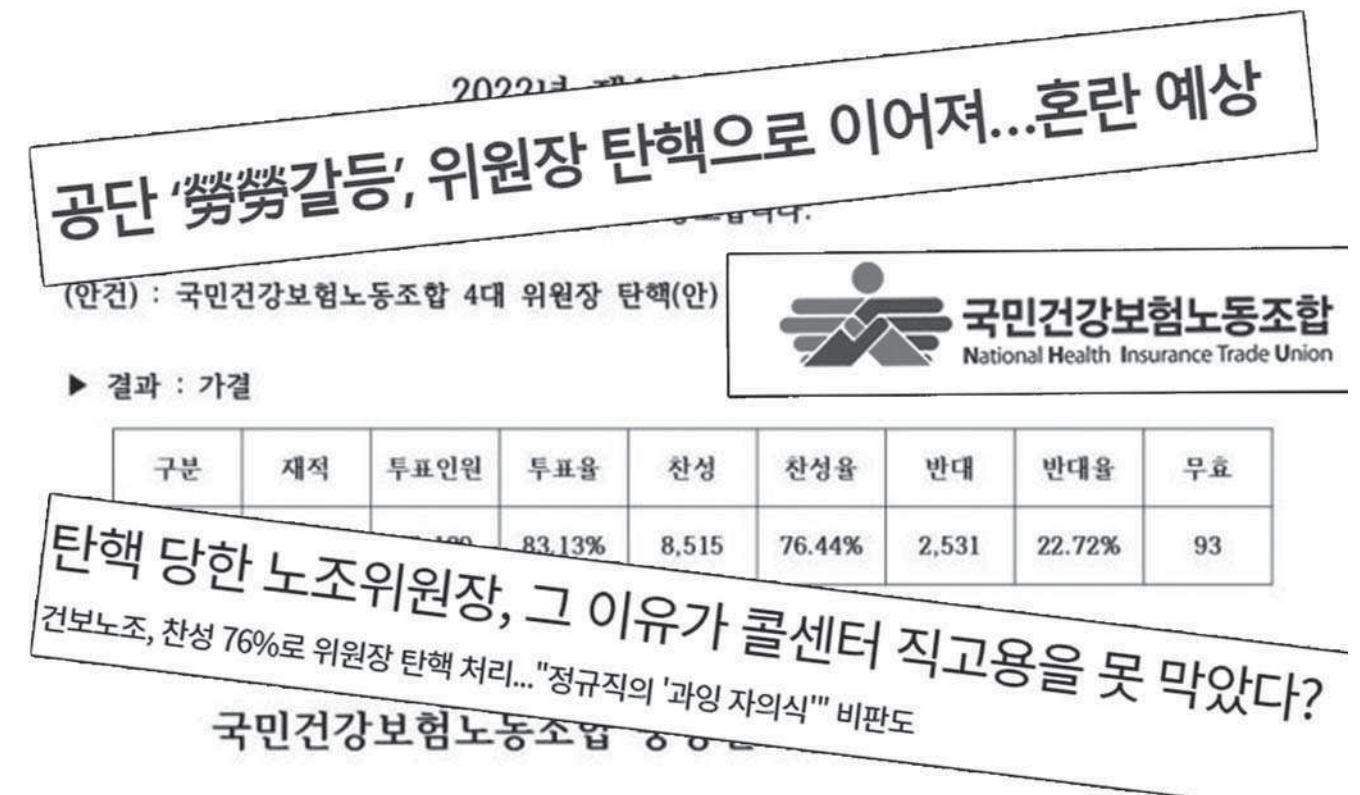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그런데 위원장이 교섭도 없이 단협 갱신을 직권조인한 것은 불만을 크게 살 일이다.

또, 사측이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여러 개악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 승진이나 인력 충원을 위한 여러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요컨대, 탄핵에서 드러난 조합원 불만의 적잖은 부분은 정규직 위원장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그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며 비정규직 연대를 거부한 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사실은 자기 조합원 이익도 제대로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번 탄핵 사유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만 반영된 것은 아니다. 못지 않게 중요한 쟁점으로는,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섞여 있다. 위원장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이다.

이처럼 이번 탄핵에는 기층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과 일부 보수적 반발이 섞여 있는 모순이 있다.



이번 건보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으로 돌아볼 지점들이 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연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동의 적인 사용자에 맞설 힘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약화

그간 공단 측은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해 왔다. 그런데 탄핵된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공단 측의 이간질과 각개격파에 맞서기는커녕 되레 분열을 주도했다.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때,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자신의 조합원 일부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힘을 합

쳐서 같은 사용자에 맞서지는 못할망정 공단 측이 가장 바라는 일을 앞장서서 해 준 것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물리치는 데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용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인력충원이나 승진 문제)을 묵살하고 심지어 개악도 추진해 왔다.

그러므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려고 애써야 한다.

본지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

자들이 자신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때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1만 3000명이나 되는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내친다면, 결국 자신들의 투쟁 명분도 약화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단결과 계급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백안시하는 것은 아니다. 건보 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에도 의견 차이가 있다. 비록 비정규직에 연대해야 한다는 세력이 결집되지 못해 그 목소리가 미약했던 게 아쉬움이었다.

특히, 연일 노조를 비난하고 친기업 시장주의적 방향을 분명히 하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다. 그는 이간질과 각개격파 시도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본지가 이전에 지적했듯이, "[비정규직이] 투쟁으로 조건 개선을 쟁취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는 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공격이 벌어질 때나 승진 문제 등에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 있다."

경쟁 논리가 아니라 계급적 단결을 구축해 공단 측을 압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조 부문주의를 뛰어넘는 정치를 가진 활동가들의 존재가 절실하다.

양효영



2021년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 투쟁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않고 “실력” 중심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이 더는 “구조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보통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데는 여가부에 친민주당 세력이 상당한 것과 관련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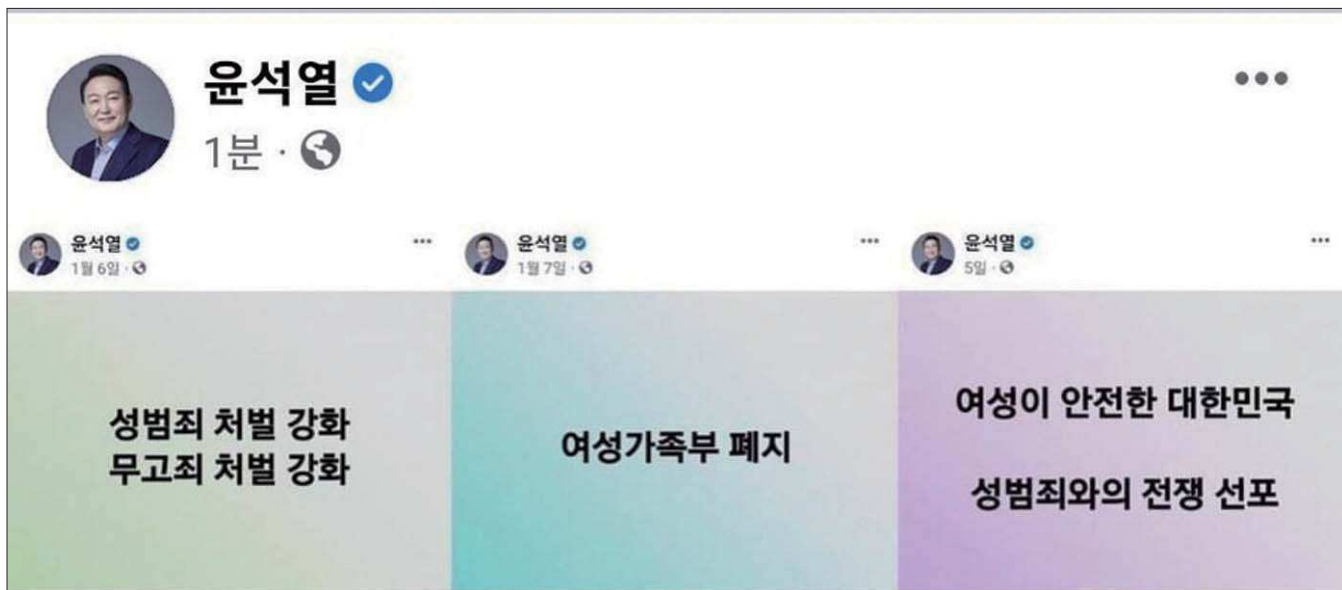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라 해도 그간 여가부가 해 온 업무들(예컨대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을 모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그간 여가부가 해 온 업무 자체를 없앤다고 보다는 다른 부서들로 분산·이관시킬 공산이 크다.

“집합적” 성차별은 없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구조적” 또는 “집합적” 성차별이 더는 없다고 한 윤석열의 말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다.

물론 여성들의 삶과 조건은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했다. 오늘날, 전에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또, 극소수 여성은 CEO나 판사나 고



“집합적” 성차별이 더는 없다고 한 윤석열의 말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다

위 공직자가 되는 등 크게 성공했고, 그들의 삶은 다수 노동계급 남성들보다도 훨씬 낫다. 중간계급 전문직이나 관리직에도 여성의 진출이 늘었다.

이것은 분명 변화한 현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림의 한쪽 측면일 뿐이다. 대다수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밑바닥이거나 더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윤석열은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제정됐으므로 성차별은 옛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남녀 차별 금지와 동일임금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8퍼센트에 불과하다. 성희롱이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다.

여성 차별은 여전히 큰 문제이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육과 가사라는 노동력 재생산은 개별 가정에서 주로 여성의 책임이 돼 있다. 지

배자들은 이를 정당화하고자 보수적 가족 관념을 옹호한다. 또,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자 성차별을 부추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너네 삶이 고달픈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네 능력 탓이다!’ 전형적인 시장과 개인주의 논리다.

다시 한 번 민주당?

윤석열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일부는 그 불만을 민주당을 지지·지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훨씬 소수인 또 다른 일부는 정의당을 향한다).

양당 정치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여성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최근 젊은 여성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에는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이 민주당을 “쇄신”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는 듯하

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간 여성 차별 개선에 전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만 말뿐인 ‘성평등’에 집권 1년 만에 수많은 여성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낙태죄도 유지하려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고서야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나마 일부 개혁(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진 것은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불편한 용기’ 집회)이 분출한 덕분이였다.

민주당(과 그 정부)은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왔지만,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정당이기에 결코 여성 차별을 끝낼 수 없었다. 자본주의 정당과 정부로서 민주당은 이윤을 우선시하기에 개별 가족에 돌봄 부담을 떠넘기고, 착취율을 높이려 사용자들의 여성 차별을 용인한다.

민주당의 친여성적인 근본적 쇄신은 불가능하다. 여성과 노동계급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맞서려면 민주당에 기대를 걸 게 아니라, 기층에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성별 이간질로 특히 노동계급을 각개격파하려 드는 만큼,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단결을 도모하며 기층에서 개방적이고 대규모적인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현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3월 24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승주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32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